

#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 행정통합 소통 연일 강행군

완도·해남·진도서 잇따라 도민공청회…내달 3일까지 진행  
권역별 타운홀미팅도 준비…도민의견 특별법 반영 총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29일 완도군·해남군·진도군을 찾아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도민과의 현장 소통에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하루에만 서남권 3개 시군을 잇따라 방문한 것을 비롯해 30일까지 이번 1주일 새 무려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첨단산업·재생에너지·해양·농수산업·관광·정주여건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앞서 지난주까지 5개 시군에서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2월 3일까지 남은 6개 시군을 모두 돌면서 22개 전체 시군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추가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남권 3개 군 공청회에서 “해남·진도·완도는 농수산업과 해양관광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해양치유·AI·데이터센터 등 전남의 미래전을 현실화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첨단산업과 해양·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정주여건 개선 등 서남권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삶과 맞닿은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 도민공청회에서 도민이 제안한 건의와 의견은 특별법안 특례와 통합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관리카드로 기록·관리하며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300만㎡에서 500만㎡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통합 정책에 반영기로 했다.

도민공청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도 참여하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며, 시군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사전 신청이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형배 “통합 효과, 시·도민 삶 바꾸는 것”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말하다’ 국회토론회 개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산을·사진)은 최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며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자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은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



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헌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전례 없는 기회다”며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대형공연장·체류형 관광자원 개발…K-문화관광 허브로”

광주지역 문화예술·관광단체 등은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해 “대규모 공연장과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9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종교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옥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 광주예총, 광주민예총, 문화콘텐츠기업, 종교단체, 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협회 등 지역 문화·관광·종교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불이익 배제 원칙,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 간 통합으로 기대되는 정책 동반상승(시너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이후 확보된 재원을

시, 광주전남행정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공청회  
요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속·관광시너지 창출 제안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29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열린 광주전남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사항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활용해 공연장, 전시장 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 간 상이한 문화예술인 지원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통합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 및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통합 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광단체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통해 광

주의 마이스(MICE) 산업과 도심 자원인, 전남의 생태·해양 관광자원과 결합된다면 체류형·복합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문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관광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장 특별법안에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통합을 통해 문화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지고, 문화예술인의 활동 무대는 넓어지며, 문화산업 성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케이(K)-문화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30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에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복지·노인·장애인·보건의료분야 등 직능별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이남오 군의장, 함평군수 출마 공식화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함평5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장은 “함평에서 태어나 함평을 지키며 살아 온 사람으로서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수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같은 제도와 예산이라도 누가 판단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군민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지금 함평에는 관행적 관리자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함평 비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형 산업구조 구축, 태양광·관광·산단 이익 군민 소득 연결, 군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함평공프협회 회장, 초당대 총동맹회장,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일 반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민주당 정청대 대표 후보 등을 역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김영남 민주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 출판기념회

내달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사진)은 다음달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자신의 저서 ‘K-문화도시 광주 서구, 일자리가 답이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서구의 구체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현실 진단에서부터 광주 서구를 세계적인 ‘K-문화 창의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AI 도농복합 스마트팜 조성, 통합복지



까지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정책 구상이 담겼다.

출판기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자 사인회와 기념촬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남 부위원장은 “이 책은 김영남 개인의 기록을 넘어 광주 서구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진심 제안서”라며 “약속하는 정치가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경수 “균형성장은 기업 찾아오게 만드는 것”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5극3특 산업전략 본격 가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스퀘어 상연장에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성장엔진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식 후 제1차 회의에서 “기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성장엔진 패키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실제로 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인재·연구개발(R&D)·재정·금융을 결합한 성장엔진 패키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협의를 지

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권역별 전략산업이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성장엔진 전문위원회가 현장과 기업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경우 정부 정책 설계와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수도권 인구와 경제 집중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균형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핵심 조건은 ‘갈 만한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생태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과제”라며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장엔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엔진 전문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과제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대표 전략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역 R&D 체계 구축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대응 △에너지 산업 등 경제·산업·과학 기술·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해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현황을 보고하고, 규제개선·인재양성·혁신(R&D)·재정·금융 등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시, ‘행정통합 준비조직 신설’  
조직개편안 재차 의회 제출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보류한 행정통합 준비 조직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29일 행정기구 설치(공무원 정원) 조례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실무를 전담할 ‘행정통합실무준비단’, 군공화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총괄하는 ‘통합공공화미래도시본부’ 신설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 안이 담겼다.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19일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의회가 “행정통합에 대비해 시의회 공무원 정원도 2~3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시는 의회의 증원 요구에 대해 “통합 대상인 전남도의회 의원 증원 상황을 보거나,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에 검토하겠다”며 이견을 드러내 왔다.

시는 검토 끝에 의회의 요구대로 시의회 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해 다시 의회에 올렸다.

시의회는 이를 다시 심사해 다음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